

DMZ 훼손 도라산고속도로 중단요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남북협력 사업이 DMZ 훼손하면 안돼"

2021-02-18 12:07:49 게재

전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으로 '문산-도라산고속도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접경지역 시민, 종교단체'
'접경지역 외 시민·종교단체'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과 "무리한 사업 추진에 앞서 남북협력 시대 DMZ와 민통선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기구부터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임기 내 착공 요구한 적 없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파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문산~도라산고속도로를 추진 중이다. 이 도로는 '평화대교'라는 이름으로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임진강을 통과하고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장단반도 내 산줄기를 파헤치는 노선으로 계획됐다.

최종 종착지는 남북출입관리사무소가 있는 도라산역 앞이다. 이곳 넓은 눈에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할 예정이다.



도라산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노선도. 맨 왼쪽 계획노선이다. 멸종위기 생물이 집중 서식하는 장단반도를 관통하고 임진강 횡단 교량 길이도 가장 길다. 그런데 국토부는 비교1안(현재안)을 고집한다. DMZ와 근접 통과하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노선 변경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 '임진강 수생태계가 훼손되고 민통선 내 지형변화가 심하다'며 '임진강을 하저터널로 통과하거나 기존 연결도로가 있는 통일로쪽 노선을 검토하라'는 협의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남북협력을 위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해야 하는데 환경부 요구대로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협의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계획노선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국토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핵심사업으로서 남북협력의 실질적 상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본 사업은 DMZ와 근접 통과하나 법정보호종 서식 여건은 유사하고, 경제성 및 안정성, 생활환경과의 조화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노선변경이 곤란해 계획노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장단반도를 관통하는 기존 계획노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일신문 취재과정에서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주민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업에 청와대가 관여하거나 임기 안에 착공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성으로 가는 도로 이미 두개** = 노현기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북측과 연결도로를 더 짓기로 합의한다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이 경우 출입관리사무소 위치에 따라 노선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미 두개나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도로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도1호선(통일로)은 개성을 거쳐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된다. 통일로는 JSA 입구까지는 왕복 4차선이다. 또 다른 도로는 민통선 안 통일촌 마을 인근에서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지나 개성공단을 거쳐 북측에서 국도1호선과 다시 만나는 왕복4차선 도로다.

노 집행위원은 "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민간인통제구역만 통과하는 신설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혈세 낭비 사업"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주)내일신문 | 대표 장명국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1953 등록일자 : 2018.12.06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13층(순화동, KG Tower) ☎ 02-2287-2300

웹사이트 운영대행사 : (주)내일이비즈 01-86-52538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